

법원, 전범기업 피해자 상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이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 사건 소멸시효에 대해 지난 10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어 미쓰비시 측의 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5일 오후 법정등 204호 법정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립(88) 할머니와 양모(90) 할머니, 오모(사망) 할머니의 남동생 오모(83) 씨, 심모(88) 할머니 등 4명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적정하다"며 미쓰비시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 동안 미쓰비시 측은 변호인을 통해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 옛 미쓰비시는 현재의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만약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원고(피해자들)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뤄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시간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돼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옛 미쓰비시중공업의 행위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러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 지난 10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어 미쓰비시 측의 청구권 시효 소멸 주장을 배척했다.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의 이 판결 이후 시점부터 시효를 인정해야 하며, 짧게는

미쓰비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배척

10월 대법 판결 시점부터 기산해야

내년 4월 말까지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미쓰비시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 1억 2000만 원, 1억5000만 원 씩 총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미쓰비시는 항소했다.

1심은 "일본의 핵심 군수산업체였던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 일본 정부의 인력 동원 정책에 적극 편승해 인력을 확

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할 것을 희유하거나 부모의 의사에 반해 지원토록 하고, 부모의 반대로 지원을 철회하려 하면 협박을 통해 지원의사를 유지하게 해 원고 등을 일본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 등은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강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조직적인 기망과 협박에 의해 일본으로 연행된

뒤 엄격한 감시 아래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하면서도 열악한 숙소와 부실한 음식만을 제공 받았을 뿐 급여조차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옛 미쓰비시중공업이 침략전쟁을 위한 전쟁물자의 생산에 원고 등을 강제로 동원하고 노무제공을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 미쓰비시와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주춘정 기자



1만포기 김장김치 나눔 5일 오전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 앞 광장에서 롯데그룹 부산지역 계열사 25곳의 봉사단 350명과 부산시민단체협의회 회원 50여 명 등 총 400명의 봉사자가 지역의 소외계층에 전달할 김장 김치를 담고 있다.

광주서 '불법시술' 무허가 의료업소 등 2곳 적발

광주시는 5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지난 2월부터 불법 의료업소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무허가 의료업소와 의료기관 등 2개소를 적발해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A업소는 미용업소로 위장한 무허가 의료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증폭속이 함유된 문신연료를 사용해 눈썹 문신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눈썹·아이리인·입술 등 문신 시술을 하면서 의료기관보다 저렴한 시술비 12만~18만원을 받아 연간 수익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일부 시술자 중에는 부종과 내분비질환 등 부작용이 악화돼 병

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시술비를 되돌려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소는 지난 2016년에도 한차례 적발됐으며 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불법 유사 의료행위로 적발됐다.

광주시 특사경은 이 업소 업주 2명은 구속 의견으로, 종사자 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 혐의는 약사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B성형외과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가가 성형외과 명칭을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B성형외과 의료인 등 4

명을 기소 의견(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불법업소들은 출처 불명의 의약품과 사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로 문신 시술자를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사자들에게는 소사장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불법 의약품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은 입소문이나 SNS 홍보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애 거짓말해" 동거녀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5일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A(37)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 계양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동거녀 B(44·여)씨와 다투던 중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가져와 복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해 화답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 온수관 용접부 녹슬어 파열 추정

지난 4일 오후 8시41분께 발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사고 원인이 녹슨 용접부 파열로 잠정 결론났다.

5일 고양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사고 현장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지역난방공사는 이날 새벽 파열된 열 수송관을 덮고 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배관 연결 용접부에 녹이 쓴 부분에서 직경 50cm 크기의 구멍을 발견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용접 등으로 부식방지재가 훼손된 부분에 녹이 슬어 높은 압력에 결국 파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열 수송관은 1991년 매설된 직경 850mm 크기의 배관으로, 당시에는 열 탐색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부식 등 이상 발견이 어려운 탓에 파열 사고 대부분이 이 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지역 일부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성남시 분당구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대부분 이 배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688km에 달하는 길이다.

한편 지난 4일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송모(68)씨를 비롯해 42명으로 집계됐으며, 한 때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던 중상자 손모(39)씨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에 앙심' 거짓 뺑소니 신고한 운전자

경찰 단속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거짓으로 뺑소니 신고한 일당이 검출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인 현모(34)씨와 이모(34)씨를 무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씨와 이씨는 지난 6월9일 0시36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검문하는 단속 경찰관에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서를 제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로부터 검문을 당한 후 오전 1시30분께 관악경찰서로 "경찰관이 급정지하도록 해 발목을 잡질렀음에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갔다"며 소위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용 진단서를 위해 사고가 일어난 지 2주가 지난 뒤에야 병원에 갔으며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 6월20일에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해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편의점 취업 해 상품권 등 훔친 30대 구속

올해 출소한 뒤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상품권 등을 훔친 30대가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구직사이트를 보고 고양시와 과천시 등 5곳의 편의점에 취업한 당일 새벽에 혼자 근무하며 복권과 담배, 문화상품권 등 1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새벽 2~3시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뒤 문을 그대로 열어두고 도주해 2차 피해까지도 유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이 기간 사우나 2곳에서 잠든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과 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